CODIT

Your Trusted Partner
in Government Affairs and Regulation Technology

신정부 국정과제 수립과 기업의 정책 대응 전략

ISSUE PAPER VOL.13

www.thecodit.com

신정부 국정과제 수립과 기업의 정책 대응 전략

지난 6월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본 이슈페이퍼는 국정과제의 의미와 수립 과정의 특징을 짚고,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기치로 민생 회복, 민주주의 복원, 사회통합, 통상·외교 재정비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국정과제의 수립과 집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조기 입법과 예산 투입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5강'을 의미하는 '3·3·5 비전'을 제시하며,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적 생태계 조성과 전통산업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의 주요 방향 및 대선 당시 공약 등을 종합하면, AI·반도체 등 이른바 'ABCD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에너지 전환, 국토공간 혁신, 공정경제 체계 확립, 노동시장 개편, 청년·금융 지원,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등이 중심축을 이룬다. 특히 청와대에 신설된 'AI 미래기획수석'에 민간 전문가를 임명한 것을 계기로, 인공지능은 단순 기술 분야를 넘어 범정부 전략으로 통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조성,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AI 기반 청년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지역균형 스타트업 육성 등이 공약된 바 있는데, 향후 국정과제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정과제가 향후 정책 환경을 규정할 기준선이 되는 만큼, 세부 과제와 예산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AI, 반도체, 플랫폼 공정성 강화, 바이오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기회를 식별하고 민관협의체 참여, 입법 대응, 정책 시나리오별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 둔화, 재정 제약,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병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해 정책 동향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민첩하고 유연한 전략 조정 능력 강화도 필수적이다.

1. 국정과제의 의미

국정과제는 대통령 임기 동안 정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과제의 종합 계획으로, 각 부처의 정책 실행계획, 예산 편성, 법령 개정 등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행정부의 추진 동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핵심축 역할을 한다.

통상적으로 국정과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된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국정 철학을 종합하여 임기 초반, 일반적으로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100대 과제 형태로 발표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인수위가 없는 경우,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TF)나 국정기획위원회 중심으로 과제를 수립하게 되며, 이 경우 전략 수립이 다소 지연되거나 부처 간 조율이 부족해질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근거, 기능 및 구성 등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정기획위원회 구성 등 비교>

구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근거 법령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법적 성격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당선인 지원 기구	대통령령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구
설치 목적	새 정부 출범 전 인수·정책 준비를 위한 법정 기구	대통령 취임 후 국정과제 설계·조정을 위한 정책 자문 기구
설치 시점	대통령 선거 후 대통령 취임 전(당선인 시기)	대통령 취임 이후(현직 대통령이 설치)
주요 기능	– 정부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 국정기조 설정 준비 – 취임행사 등 준비 – 총리·장관 후보자 검증 – 인수에 필요한 기타 사항	– 정부 조직·기능·예산 파악 – 국정기조 설정 – 국가 주요 정책 선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대통령의 국정기획 관련 자문
구성 방식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법적 구속력	법률상 기구로 법적 강제력 있음	자문기구로서 권고 기능, 법적 구속력은 낮음
대표성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기능 중심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략 기획 중심

따라서,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은 정책 초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간 예산 협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매년 6~7월은 기재부가 부처별 예산 요구안을 검토·심사하는 시기인데, 이 시점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은 기조실과 예산실의 조정 기준이 되어 국정과제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기재정계획(5년)에 반영되어 중장기 정부 재정 운용 방향에 지속적 영향을 미친다. 결국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핵심 정책 수립기구로서, 그 활동은 중장기 국정 운영 방향 및 예산 구조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과정, 그리고 정책 조정 결과에 대해 각별한 주목이 필요하다.

2025년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가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초기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여대야소 정국은 입법 추진의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하여,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 정부보다 더욱 크고 즉각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기둔화, 미국의 통상 정책 강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적 환경은 정책 실현 과정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신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이유다.

<표 2. 18대~20대 정부 국정과제 수립 일정 비교>

정부	취임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시점	특징
18대 박근혜	2013.2	O	2013.3	인수위 주도, 140대 과제
19대 문재인	2017.5	X	2017.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구성, 100대 과제
20대 윤석열	2022.5	O	2022.5	인수위 주도, 110대 과제
21대 이재명	2025.6	X	2025.8	여대야소, 강력한 추진력

2. 국정과제의 구성과 특징

(1) 기본 구성 체계

국정과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제시하는 국정비전을 최상위 개념으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목표, 각 목표별 전략목표(또는 국정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단위인 세부 국정과제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하며, 예산 및 입법 계획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국정과제 체계는 정권마다 표현 방식과 명칭에는 차이가 있으나, 비전 → 목표 → 전략 → 과제로 이어지는 계층적 구조는 공통적으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18대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국정목표 하에 21개의 전략목표와 140개의 국정과제를 구성하였다. 19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5대 국정목표와 20개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과제를 수립하였다. 20대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삼고, 6대 국정목표, 20개 약속(전략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각 정부의 국정 철학과 집권 전략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준다.

<표 3. 18대~20대 정부 국정과제 주요 구성 비교>

구분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20대 윤석열
국정비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목표	5대 목표	5대 목표	6대 목표
전략목표	21개	20개	20개
국정과제 수	140개	100개	110개

(2) 정부별 국정과제 정책 특징 비교

18대부터 20대까지의 국정과제는 각 정부의 국정 철학과 시대 상황에 따라 핵심 내용과 전략 방향이 크게 달라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18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 주도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했다. 이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반면 19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중심에 두고, 분배와 경제 정의를 강화하는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어서 20대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방식을 강조하며, AI·반도체·디지털 전환 등 전략산업 중심의 민간 주도형 성장체제로 변화하였다.

복지와 노동정책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18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자립 지원이 핵심이었고, 19대는 보편적 복지 확대와 국가의 책임 강화를 통해 복지 국가로의 전환을 지향하였다. 20대에 이르러서는 선별적 복지와 효율성을 강조하며,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로 재편되었고, 노동정책에서도 유연성과 시장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기술 및 산업 전략은 18대의 ICT 기반 창조경제에서 19대의

4차 산업혁명 선도 정책으로 확대되었으며, 20대에서는 AI, 반도체, 디지털 금융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략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었다.

지역 정책의 경우 18대는 통합과 회복이라는 보편적 접근을 취했으나, 19대에서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균형 발전을 강조하였다. 20대 윤석열 정부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국정목표로 제시하며 지역주도의 성장기반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18대가 전통적 안보 중심 접근을 유지한 반면, 19대는 남북 화해협력 및 평화외교를 핵심 기조로 삼았다. 이후 20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책임 외교, 중추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외교 전략을 글로벌 가치 기반의 다자적 외교 중심으로 확장시켰다.

<표 4. 18대~20대 국정과제 전략 키워드 변화 추이>

정책 분야	18대 박근혜 정부 (2013–2017)	19대 문재인 정부 (2017–2022)	20대 윤석열 정부 (2022–2025)	변화 추이 요약
경제 성장	창조경제, 성장동력, 중소기업 활성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민간 주도 성장, 전략산업, 디지털 경제	정부주도 창조경제 → 분배중심 공정경제 → 민간 주도 전략산업 성장
일자리 정책	청년 창업, 벤처육성	좋은 일자리, 노동 존중	노동 유연화,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강조 → 노동권 강화 → 노동시장 유연성 및 효율성
복지 및 사회안전망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자립 지원	포용적 복지, 국가 책임 보육	선별적 두터운 복지, 안전·보건 우선	복지 보편화 지향 → 국가 책임성 강화 → 선별·집중형 복지
교육 및 인재 육성	창의인재 양성, 꿈과 끼	보육·교육 공공성 강화, 문화국가	창의적 교육, 미래 인재, 청년 지원	창의교육 → 국가주도 교육복지 → 미래 인재 중심 교육체계
과학기술·혁신	창조경제 생태계, ICT 활용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선도	AI·반도체, 디지털 금융, 혁신 인프라	ICT 중심 창조경제 → 기술혁신 기반 산업전환 → 디지털 전략 산업 중심
지역균형 발전	통합과 화합, 농산어촌 회복	자치분권, 균형발전	지방시대, 지역 투자 인프라	통합과 회복 → 자치와 분권 → 지역 주도 성장 기반 구축
통일·외교·안보	안보 강화, 평화기반	남북 화해 협력, 책임 국방	글로벌 중추국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보수적 안보 중시 → 평화·협력 지향 외교 → 글로벌 책임국가

(3) 국정목표와 연계된 입법 추진

각 정부는 고유의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고용·복지' 국정목표 하에 2014년 기초연금법을 제정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핵심 국정목표로 내세우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독립적 수사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입법은 권력기관 개혁과 투명한 정부 실현이라는 국정 철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대표 사례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운영의 중심 기조로 설정하고, 국가전략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되고,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되었다. 이 법 개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의 활력을 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3.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예상 트렌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민생 회복, 민주주의 복원, 사회통합, 통상·외교 재정비를 핵심 과제로 안고 출범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국정과제의 수립과 집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빠른 입법과 예산 투입을 통한 조기 성과 창출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편과 국무총리 및 내각 인선 등 과정은 신정부의 정책 철학과 통치 스타일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으로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5강'을 의미하는 '3·3·5 비전'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문화, 방위산업 등 이른바 'ABCD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과 전통 제조업의 구조개혁을 통해 체감 가능한 지속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등 인위적 경기 부양 대신 과학기술 기반의 성장 동력 확충과 창조적 생태계 조성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후보시절 공약에 기초하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트렌드를 예상하면, 청년과 민생 중심의 포용적 경제 회복, 노동시장 구조 개선, 공정경제 확립, AI·반도체 등 신산업 전환이 중점 추진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는 정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에 신설된 AI 미래기획 수석에 민간 AI 전문가인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이 임명되면서, 신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은 단순한 기술 육성을 넘어 국정 전반의 디지털 전략과 연결되는 핵심 축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정과제 설계 과정에서 AI를 단일 산업이 아닌 범부처 전략으로 통합 추진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벤처·스타트업을 국가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조성 ▲모태펀드 예산의 대폭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AI 기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역 벤처·스타트업을 지역균형발전의 엔진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향후 국정과제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조기 입법과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데, 이는 성과 중심 초기 정국 운영 전략과도 맞물린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남북 소통채널 복원으로 코리아 리스크 해소와 함께, 경제안보 현안 총괄 컨트롤 타워 구축 등으로 경제안보 외교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방산·AI·반도체 등 미국과 첨단 산업 협력 확대 등 공급망 외교 역시 신정부 초기부터 병행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국정기조는 신정부의 조기 성과 창출과 정국 주도권 유지를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인데, 향후 국회 협조 여부 및 글로벌 정세 흐름 등 조건에 따라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여부가 좌우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예상 트렌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트렌드 및 성장전략>

분야	주요 트렌드 및 전략 방향
성장동력 확장	ABCD 산업 집중 육성, 에너지 전환, 국토공간 혁신,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AI·디지털	AI 3대 강국 진입, 민간 100조 투자 유도, 인프라·인재 집중 지원
공정경제	지배주주 견제 강화 등 기업지배 구조 개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노동·복지	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 정년 연장 및 주 4.5일제 검토, 노동권 강화
청년·금융	청년미래적금, 학자금 대출 완화, 청년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벤처·스타트업	40조 벤처투자시장,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지역 균형 스타트업 육성
외교·통상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남북 소통채널 복원, 공급망 외교 강화

4. 기업에 주는 시사점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은 향후 5년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결정짓는 기준선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 전반에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에 돌입한 만큼, 국정과제 수립과 실행이 병행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 속도가 빠르고,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입법 및 예산 집중 투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국정과제의 구체적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선제적이며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정책 방향성과 실행의 기준**
  국정과제는 부처별 정책 실행계획 및 입법 로드맵 수립의 근거가 되며, 규제 완화·강화, 세제 혜택, 인허가 절차 등 기업 활동에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민관 협력 기회 확대**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ESG 확산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 협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참여 전략이 요구된다.

- **대응 전략의 선제적 수립**
  기업들은 변동성이 높은 정책 환경 속에서도 신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한 전략 수립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정과제 발표 전에는 대선 공약과 정책 플랫폼을 기반으로 업종별 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하고, 유관 부처 및 위원회와의 소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발표 이후에는 민관협의체 참여와 함께 입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핵심 정책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핵심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기후산업, 플랫폼 공정성 강화 등이 있으며, 아울러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강화될 전망이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과세특례 일몰제, 벤처투자 세제지원,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 업계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 건의와 전략적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민간 주도 혁신기반 조성 기조를 기회로 삼아, 제도 개선 요구를 구체화하고 정책 결정권자와의 접점을 조기에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6. 업종별 주요 시사점>

업종	주요 시사점
디지털·ICT	AI 산업 대규모 투자 기회 확대, 데이터 인프라 구축 지원, AI 인재 확보 경쟁 심화
제조업	첨단 산업(반도체, 조선, 방산 등) 중심 공급망 외교 강화, 해외 시장 진출 및 협력 기회 확대
금융	공정경제 강화에 따른 대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예상
플랫폼	특수고용직 보호 강화로 인한 노동 비용 상승 가능성
바이오헬스	AI 융합 헬스케어 활성화 가능성, 데이터 기반 의료 서비스 확산 기대
노동집약 산업	노동권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부담 주 4.5일제 도입 장기 추진에 따른 노동시간 재조정 필요성
스타트업·벤처	대규모 벤처투자 및 공공펀드 기반 투자시장 확대, AI 청년창업기업 세제지원, 퇴직연금 투자 허용 등

5. 결론 및 제언

국정과제는 신정부의 정책 실천을 위한 설계도이자, 국정철학을 구체화하고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선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목록을 넘어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각 부처의 예산 편성과 입법 활동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 전략이 기업과 각계의 정책 대응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새로운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정책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정무적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국정과제 발표 이전에는 기초적인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표 이후에는 국정과제가 반영된 예산안과 법안 발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

- **정책 불확실성:** 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 세부과제 조정 또는 축소 가능성
- **대외 변수:**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기술갈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정책 실행 차질
- **예산 한계:** 재정 건전성 우려로 인한 일부 정책 축소 또는 우선순위 재조정 가능성
- **사회적 갈등:** 정책 강행에 따른 노사, 산업계 반발 및 사회적 갈등 심화 가능성

따라서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사전 수립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민첩한 전략 조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규제 강화, 지원 축소 등 잠재적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변동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액션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정책 동향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정과제 발표 전후 정책 변화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처별 실행계획과 입법 동향을 분석해야 한다.
- **핵심 부처 및 정책 위원회와의 소통 채널을 조기에 확보**하고, 민관협의체 활동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정책 키워드 중심으로 전략 포지셔닝을 조정**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경우 주요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 제안과 전략적 연대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민간 주도 혁신 기조를 실질적인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 결정권자와의 접점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정책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를 사전 구축**해 다양한 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유연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결국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신속한 대응 여부가 기업과 조직의 정책 리스크 관리와 새로운 기회의 선점에 있어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될 것이다.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입법·행정·외교·통상의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합적 정책 환경 속 기업의 대응 역량을 뒷받침하는 민간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AI, ESG, 헬스케어·제약, 순환경제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정책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며,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여 실질적 정책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이번 이슈페이퍼와 관련해 추가 문의나 세션이 필요하신 경우 **contact@thecodit.com** 으로 연락주시거나, **thecodit.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Authors' Contact Information

정지은 대표이사
CODIT
contact@thecodit.com

송해영 원장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haeyoung@thecodit.com

전서형 연구원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stella@thecodit.com

윤채영 연구원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victoria@thecodit.com

박승민 연구원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madison@thecodit.com

CODIT

Your Trusted Partner
in Government Affairs and Regulation Technology

Company	㈜코딧
Addres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39, 앵커원 2층
E-mail	contact@thecodit.com
Phone number	070-8820-6120